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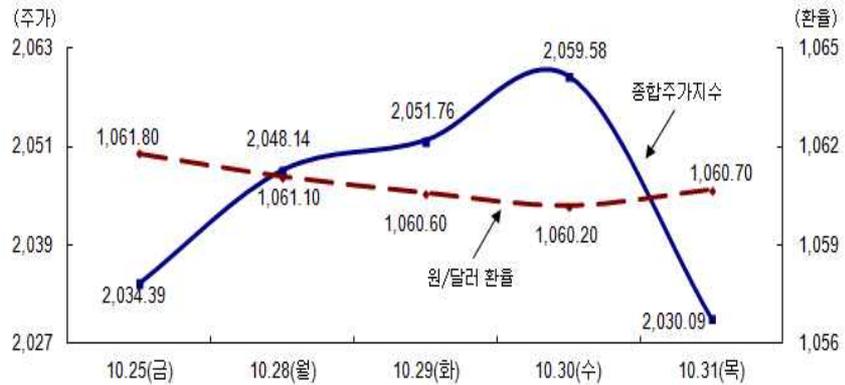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 한국의 국제위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필요하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5~10.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의 국제위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필요하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 성 : 이 용 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 한국의 국제위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의 ODA 사업 개요

한국은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왔으나,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가입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특히 2013년은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DAC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ODA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의 ODA 사업 현황

(ODA 전체 규모) 201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2년 약 15.5억 달러로 증가했고, ODA/GNI 비율도 0.12%에서 0.14%로 증가했다.

(예산 규모) 2010년 OECD-DAC 가입 직후 9,800억 원에서 2013년 1조 4,255억 원(무상 7,569억원 / 유상 6,686억원)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2011년 기준 양자 원조 중 약 50%가 아시아에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등 유무상 원조 상위 5개국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 한국 ODA 사업의 국제비교

첫째(공여규모), 한국의 ODA 공여규모는 DAC 가입 4년 차 실적 기준으로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공여규모는 13억 달러로 DAC 회원국 평균 56억 달러에 비해 작지만, 2009~2012년 간 한국의 ODA 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17.4%에 달한다. 이는 일본(1960~1963년, 7.0%)과 미국(1961~1964년, 4.5%)보다 높고, 덴마크(1960~1963년, 24.8%), 뉴질랜드(1973~1976년, 19.1%)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무상원조 비율), 한국의 ODA 무상원조 비율은 DAC 가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2011년 현재 58.1%로, 일본(54.0%) 등 선진국의 가입 초중반 상황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DAC 회원국 평균 88.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셋째(비구속성원조 비율), 2011년 한국의 비구속성원조(untied aid) 비율은 51.1%로 2007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무상원조비율의 경우 2000년 9.5%에서 2007년 26.1%, 2011년에는 68.4%로 상승했다. 하지만 유무상원조 전체 비율은 2011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83.5%)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지역별 비중), 한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아시아 지원 비중은 63.2%인 반면, DAC 회원국은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34.7%)에 집중돼 있다.

다섯째(분야별 비중), 한국은 DAC 회원국에 비해 경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1년 기준 36.8%로 DAC 회원국 16.3%에 비해 2배나 높은 반면, DAC 회원국들은 한국에 비해 인도적 지원과 기초생활부문 등에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요약 및 시사점

한국의 ODA는 OECD-DAC 가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와 국제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앞서 살펴본 미흡 사항 등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모범적·통합적 ODA 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ODA 통합 추진체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국과의 동반성장과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ODA를 통한 한국의 외교역량 확대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빚을 진 국가들에 대해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개요

- (연구 배경) 2013년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¹⁾에 가입한 지 4년차가 되는 해이므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ODA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은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었으나, 2009년 11월 25일 OECD-DAC 가입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
 - 한국은 1945년부터 약 50년간 총 128억 달러의 ODA를 지원받는 수원국이었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과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1990년대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KOICA를 설립해 공여국으로 활동하기 시작
 - 2009년 DAC 가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본문에서는 DAC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ODA 현황을 확인해 보고 한국의 ODA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함
- (ODA의 정의)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원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각종 공여를 의미
- (유형) 수원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구분

<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형태 >

구분	상환조건	원조유형	주관기관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의무 有, 차관보다 유리함)	- 개발사업차관 - 민자사업차관	기재부 (수출입은행)
	무상원조 (상환의무 無)	- 프로젝트, 기술협력 - 공공-민간파트너십	외교부 (KOICA)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 국제기구 출연 및 출자	기재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 국제기구 양허성 차관	외교부

자료 : 외교통상부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자료 재구성.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 산하 위원회로 회원국들 간 정책대화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상호 조정 및 효율 제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규모 확대 및 원조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 협의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부정책 추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 후 2010년부터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실시 중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10)
 - 원조규모와 비율 :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 유·무상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40:60 내외로 유지
 - 양자·다자 간 비율 : 2015년까지 70(양자) : 30(다자) 비율을 유지
 - 지역별 비율 : 아시아 중점 기조 유지, 아프리카 지원 확대 (아시아55%)
 - 원조체제 개편 : 유·무상 별도로 추진되었던 기존 원조체제를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추진체제로 개편, 분절화 해소 및 원조효과성 제고
-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 (2012. 9)
 - 한국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자립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 참여와 협력 : 국내기관, 기업 참여 확대, 수원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 효과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2013년도 종합 시행계획 (2012. 12)
 - 양자원조 대상 ODA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조정
 - 중점협력대상국에 ODA 재원 70% 이상 집중 (베트남, 필리핀 등)
 - 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분야에 해당국 ODA 70% 이상 집중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 2)
 -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촉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별 협력 강화
 - ODA 투명성 및 소통강화로 국민신뢰 및 지지 확대

< 26개 중점협력대상국 현황 >

지역	중점협력대상국
아시아 (11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8개국)	에티오피아, 가나, DR 콩고,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중동·CIS (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개국)	솔로몬군도

자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3년 ODA 정책 설명회 자료집』.

주 : 진하게 표시된 국가는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완료국.

2. 한국의 ODA 사업 현황

- (ODA 전체 규모) 201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2년 약 15.5억 달러로 증가, ODA/GNI 비율도 0.12%에서 0.14%로 증가
-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양·다자원조 간 비율(7:3) 및 유·무상원조 간 비율(4:6)의 목표치를 유지 중
 - ODA 확대와 관련, 우리정부는 DAC 가입당시인 2009년 0.10% 수준이던 ODA/GNI 비율을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계획
- 양자원조 : 2012년 양자원조 규모는 전년(9.9억 달러) 대비 17.4% 증가한 11.6억 달러를 기록, 전체 ODA의 약 75%를 기록
 - 유상협력 : 2012년 기획재정부·EDCF 규모는 약 4.6억 달러 규모(28개국, 98개 사업)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자 간 원조 중 40.1% 수준
 - 무상협력 : 외교통상부·KOICA의 무상원조 실적은 전년대비 21.0% 증가한, 약 7.0억 달러 규모(87개국, 1,431개 사업)로 성장했으며, 양자 간 원조 가운데 59.9%를 차지
- 다자원조 : UN 및 국제금융기구(MDB),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약 3억 9천만 달러(전체 ODA 중 25.1%) 규모를 지원

< OECD-DAC 가입 이후 한국의 ODA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

구성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비중
ODA (A+B)	1,173.8	1,324.6	1,550.9	17.1	100.0
양자간 ODA (A)	900.6	989.6	1,162.1	17.4	74.9
유상원조(EDCF)	326.7	414.6	466.1	12.4	양자 중 : 40.1
무상원조(KOICA)	573.9	575.0	696.0	21.0	양자 중 : 59.9
다자간 ODA (B)	273.2	335.0	388.8	16.1	25.1
ODA/GNI (%)	0.12	0.12	0.14	0.02%p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ODA KOREA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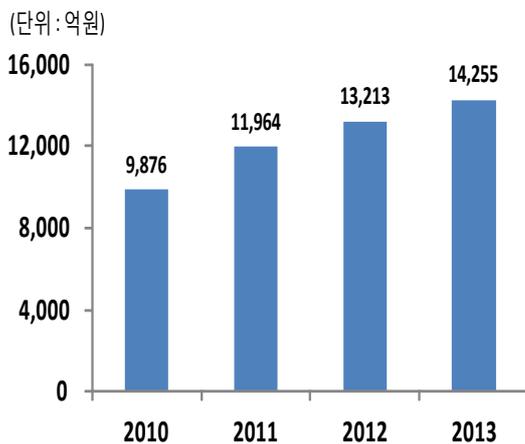
주1 : 순 지출 기준.

2 :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12년 실적치.

○ (예산 규모) 2010년 OECD-DAC 가입 직후 9,800억 원에서 2013년 1조 4,255억 원(무상 7,569억원 / 유상 6,686억원)으로 증가세 유지

- 대부분의 예산이 기획재정부·EDCF(40%)와 외교통상부·KOICA(48%)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5개 부처 수준
- 2013년 기준 기획재정부·EDCF가 7,0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교통상부·KOICA가 5,690억 원 순

< 양자 간 ODA 예산 현황 (2010~2013) >



자료 : 국회예산처, 각 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주 : 부처별 ODA 예산 중 다자 원조액을 제외.

< 부처별 양자원조 예산 현황 >

(단위 : 억 원)

	2012	2013
기획재정부 (EDCF 포함)	6,544	7,077
외교통상부 (KOICA 포함)	5,375	5,690
교육과학기술부	404	522
농촌진흥청	121	139
농림수산식품부	126	150
보건복지부	107	126
환경부	73	101
기타부처	463	450
합계	13,213	14,255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사업 형태) 프로젝트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초청연수, 민관협력, 개발컨설팅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2013년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65.3%)으로 초청연수(7.2%), 개발 컨설팅(4.3%), 민관협력(2.4%) 사업 순으로 확대되는 추세

< 양자원조 예산의 사업 형태별 현황 (2011~2013) >

(단위 : 억 원)

연도	프로젝트	봉사단	초청연수	개발컨설팅	민관협력	긴급구호	기타	합계
2011	9,242	817	488	-	170	190	1,057	11,964
2012	9,177	1,001	569	462	368	218	1,418	13,213
2013	9,314	1,054	1,021	607	347	236	1,676	14,255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각호.

○ (지역별) 2011년 기준 양자 원조 중 약 50%가 아시아에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원조 상위 5개국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

- 2011년 지역별 양자 간 ODA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양자간 ODA 9억 8,900만 달러 중 63.2%(6억 2,500만 달러)가 아시아에 집중

· 다음으로 아프리카 1억 9천만 달러(18.0%), 기타 9,600만 달러(9.7%), 중남미 6,400만 달러(6.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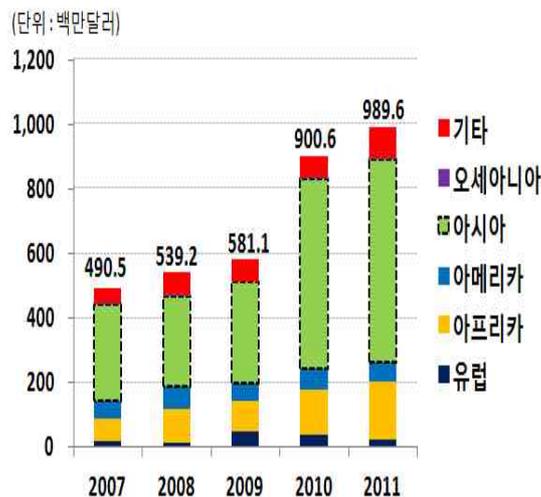
· 아시아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된 것은 거리상으로 근접하고, ASEAN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 인프라 구축수요의 많음,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적용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2011년 양자원조 지원 상위 5개국 현황을 보더라도, 모두가 아시아권 국가이며, 특히 베트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음

· 2011년 한국의 유상원조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약 1억 달러로 1위며, 대부분의 상위권 국가가 아시아권에 국한

· 한편 무상원조도 몽골(약 3,200만 달러), 베트남(약 3,000만 달러) 등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유상원조에 비해선 규모가 작은 편

< 지역별 양자원조 지원 실적 (2007~2011) >



자료 : 수출입은행 ODA통계(순지출 기준).
주 : 2012년 통계 미비로 2011년까지 제시.

< 2011년 양자원조 지원 상위 5개국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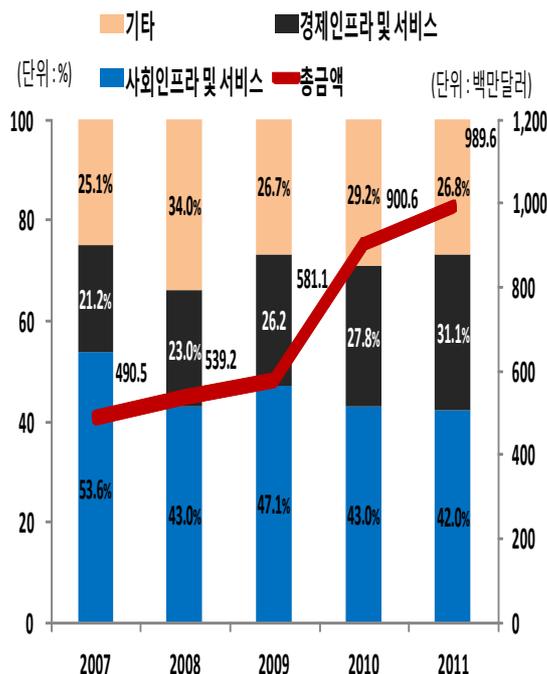
순위	유상원조	무상원조	합계
1	베트남 (109.4)	몽골 (32.6)	베트남 (139.5)
2	방글라데시 (70.8)	베트남 (30.1)	방글라데시 (80.0)
3	캄보디아 (39.1)	아프가니스탄 (28.0)	캄보디아 (62.2)
4	스리랑카 (31.9)	필리핀 (25.8)	스리랑카 (43.4)
5	요르단 (26.9)	캄보디아 (23.1)	필리핀 (35.7)

자료 : 수출입은행 ODA통계(순지출 기준).

○ (분야별) 2009년 OECD-DAC 가입을 전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중이 크게 확대

- 2007년 4억 9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1년 9억 9천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경제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
 - 2009년 OECD-DA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빈곤·질병퇴치 등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해 기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부문별로는 사회 인프라 분야의 비중은 감소(2007년 53.6%→2011년 42.0%)한 반면, 경제 인프라 분야(2007년 21.2%→2011년 31.1%)는 10%p 증가
-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 인프라 분야의 교통·물류 부문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011년 기준)
 - 사회 인프라 : 2011년 총 원조금액은 약 4.2억 달러로 전체 원조의 약 42%를 차지했고, 교육 분야가 약 1.8억 달러(18.1%)로 전체 두 번째 규모
 - 경제 인프라 : 2011년 약 3.1억 달러로 전체 원조의 약 31%를 차지했고, 교통·물류 부문에 대한 지원이 약 2.3억 달러(23.2%)로 가장 큰 규모
 - 기타 : 2011년 약 2.7억 달러로 전체 원조의 약 27%를 차지했고, 생산부문(0.8억 달러), 행정비용(0.5억 달러), 인도적 지원(2.4억 달러) 등으로 구성

< 분야별 양자원조 지원 비중 (2007~2011) >



자료 : 수출입은행 ODA통계(순지출 기준).

< 2011년 양자원조 분야별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금액	비중
사회 인프라	교육	179.4	18.1
	보건	91.2	9.2
	식수공급	53.0	5.4
	공공행정	71.7	7.2
	기타	20.8	2.2
누계		416.1	42.1
경제 인프라	교통·물류	229.8	23.2
	통신	40.0	4.0
	에너지	35.0	3.5
	기타	3.4	0.4
누계		308.2	31.1
기타	생산부문	77.1	7.8
	다부문	72.9	7.4
	행정비용	53.6	5.4
	인도적지원	23.8	2.4
	미배분 등	36.0	3.6
	물자원조	1.9	0.2
	누계	265.3	26.8
합 계		989.6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ODA통계(순지출 기준).

3. 한국 ODA 사업의 국제비교

1) 비교 대상 및 방법

- 비교 대상 : 한국을 제외한 OECD-DAC 23개 회원국
- 비교 방법 : DAC 회원국의 ①전체 공여수준, ②유·무상원조 비율, ③구속성2)·비구속성3) 원조 비율, ④지역별, ⑤분야별 현황 등 5가지 측면에서 비교

< 2011년 기준 OECD-DAC 회원국 ODA 총괄표 >

	ODA 총규모 (백만달러)	ODA/GNI (%)	1인당 ODA (달러)	무상원조 비율 (%)	비구속성 원조 비율 (%)	가입 연도	GDP (십억달러)	1인당 GDP (달러)
미국	30,783	0.20	99	100.0	65.5	1961	14,991.3	48,113
독일	14,093	0.39	172	73.5	92.9	1960	3,600.8	44,021
영국	13,832	0.56	222	95.0	100.0	1961	2,444.9	38,961
프랑스	12,997	0.46	199	60.1	99.0	1960	2,779.7	42,522
일본	10,831	0.18	85	53.2	94.3	1960	5,896.8	46,135
네덜란드	6,344	0.75	381	99.7	82.7	1960	836.1	50,085
스웨덴	5,603	1.02	589	99.9	99.8	1965	539.3	57,071
캐나다	5,459	0.32	158	100.0	99.2	1960	1,777.8	51,554
호주	4,924	0.34	212	98.6	100.0	1966	1,384.1	62,003
노르웨이	4,756	0.96	953	92.0	100.0	1962	491.1	99,143
이탈리아	4,326	0.20	71	94.1	53.8	1960	2,192.4	36,104
스페인	4,173	0.29	88	81.6	93.0	1991	1,476.9	31,985
스위스	3,051	0.45	384	97.0	98.0	1968	659.3	83,326
덴마크	2,931	0.85	525	98.0	97.2	1963	333.6	59,889
벨기에	2,807	0.54	256	99.7	95.8	1960	513.9	46,513
핀란드	1,406	0.53	260	95.0	84.5	1975	263.2	48,843
한국	1,325	0.12	27	58.1	51.1	2009	1,114.7	22,393
오스트리아	1,111	0.27	132	99.8	52.0	1965	417.7	49,581
아일랜드	914	0.51	199	100.0	98.4	1985	220.8	48,249
포르투갈	708	0.31	67	31.8	12.0	1991	237.6	22,504
그리스	425	0.15	38	100.0	47.8	1999	289.6	25,631
뉴질랜드	424	0.28	96	100.0	93.4	1973	161.8	38,227
룩셈부르크	409	0.97	802	100.0	98.9	1992	59.2	114,211
아이슬랜드	26	0.21	-	100.0	-	2011	14.1	44,120
평균	5,569	0.31	137	88.6	83.5	-	1,779.0	50,466

자료 : 통계청,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주 : OECD는 매년초 전년도 확정치를 통계 발표하기 때문에 2011년도 지표를 토대로 비교.

- 2) 구속성 원조(tied aid)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 및 서비스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이며, 공여국 입장에서는 국익 도모 등의 장점이 있지만, 수원국 입장에서는 비효율적 사업 추진 등의 단점이 존재함.
- 3)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 제한 없이 전 국가의 사업체에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구속성 원조가 늘어날 경우 수원국의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증대되고, 공정무역거래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음.

2) 비교 결과

○ (공여규모) 2011년 기준 DAC 회원국들의 공여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DAC 가입 4년 차 실적 기준으로는 빠른 성장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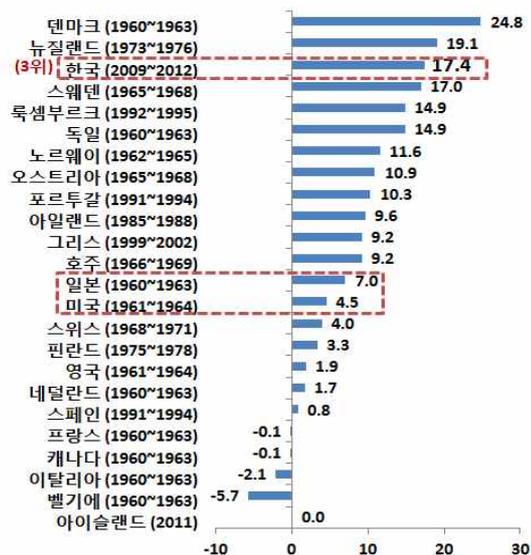
- DAC 회원국 비교 : 2011년 기준 한국의 ODA 총규모, ODA/GNI 비율, 1인당 ODA 규모는 OECD-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미진한 수준
 - ODA 총규모 : 2011년 한국의 ODA 총규모는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DAC 24개국 평균인 55.7억 달러의 1/4 수준에 불과
 - ODA/GNI 비율 : 2011년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2%로, 전체 DAC 회원국 평균인 0.31%의 약 1/3 수준
 - 1인당 ODA 규모 : 2011년 기준 DAC 회원국 평균이 137달러임에 반해 한국은 27달러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DAC 가입시점 대비 4년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ODA 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2009~2012년 간 한국의 ODA 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17.4%에 달해 일본(1960~1963년, 7.0%)과 미국(1961~1964년, 4.5%)보다 높고, 덴마크(1960~1963년, 24.8%), 뉴질랜드(1973~1976년, 19.1%)에 이어 3위를 기록

< 2011년 DAC 회원국 ODA 공여도 순위 >
(단위 : 백만달러, %, 달러)

순위	ODA 총규모	ODA/GNI 비율	1인당 ODA
1	미국 (30,783)	스웨덴 (1.02)	노르웨이 (953)
2	독일 (14,093)	룩셈부르크 (0.97)	룩셈부르크 (802)
3	영국 (13,832)	노르웨이 (0.96)	스웨덴 (589)
4	프랑스 (12,997)	덴마크 (0.85)	덴마크 (525)
5	일본 (10,831)	네덜란드 (0.75)	스위스 (384)
	17위 한국 (1,325)	24위 한국 (0.12)	24위 한국 (27)
평균	5,569	0.31	137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DAC 가입 이후 4년간 ODA 총액 증가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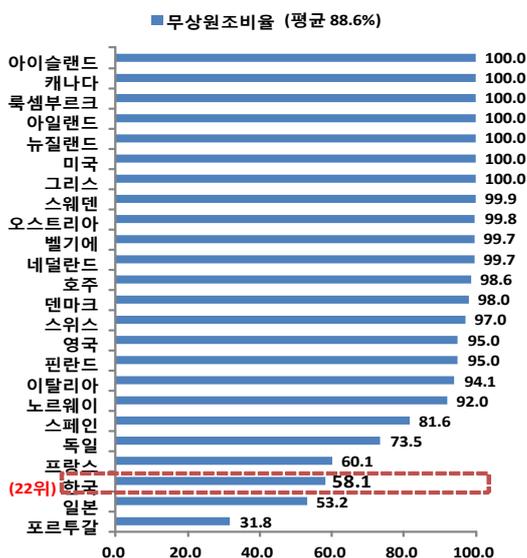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1 : 국가 명 옆의 괄호는 국가 별 DAC 가입 후 4년까지 표기.
2 : 한국의 2012년 실적은 잠정치 사용.

○ (무상원조 비율) 2011년 기준 DAC 회원국들의 무상원조 평균 비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DAC 가입 초중반 무상원조 상황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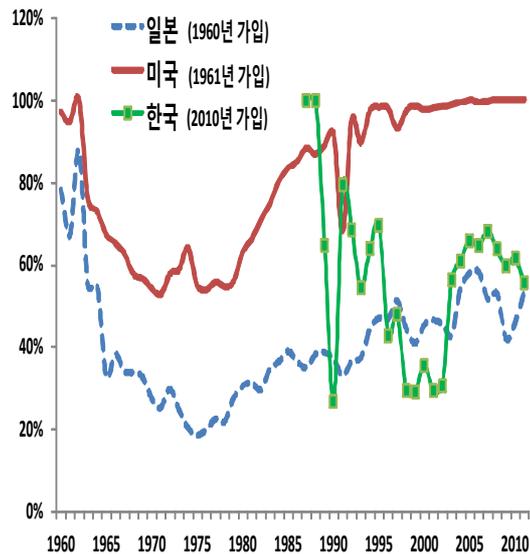
- DAC 회원국 비교 : 2011년 기준 한국의 ODA 가운데 무상원조 비중은 58.1%로 OECD-DAC 회원국의 평균 비율 88.6%에 비해 낮은 수준
 - DAC 24개국 평균 금액 : DAC 24개국의 평균 무상원조 금액이 38억 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5.8억 달러(18위)에 불과
 - DAC 24개국 평균 비율 : 평균 비율은 88.6%이며, 한국(58.1%)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53.2%)과 포르투갈(31.8%)순임
 - 1인당 GDP 유사국 : 그리스(100.0%), 스페인(81.6%)에 비해서 낮음
- 한국의 DAC 가입 초반의 무상원조 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임
 - 미국(1961년 DAC 가입)과 일본(1960년 DAC 가입, 1963년 기준 54.0%) 모두 OECD-DAC 가입 10~15년 이후인 1970년대 중·후반부터 무상원조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
 -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일본보다도 높은 무상원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11년 DAC 회원국 무상원조 비율 >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한·미·일 무상 원조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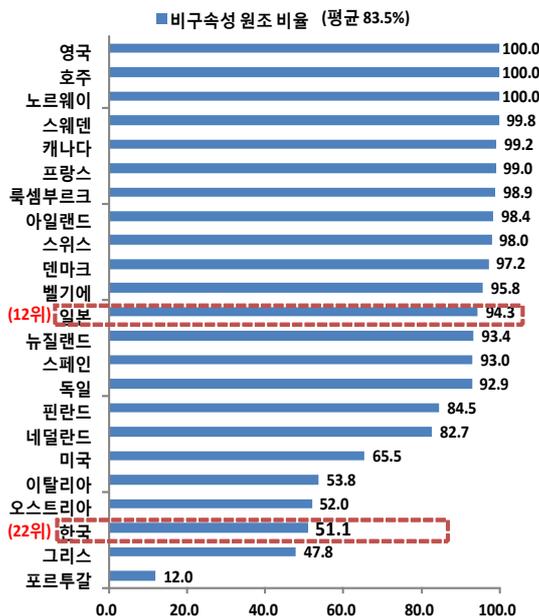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 총지출 기준.

○ (비구속성원조 비율) DAC 회원국에 비해 구속성원조(tied aid) 비율이 높지만, 2007년 이후 양자원조 간 비구속성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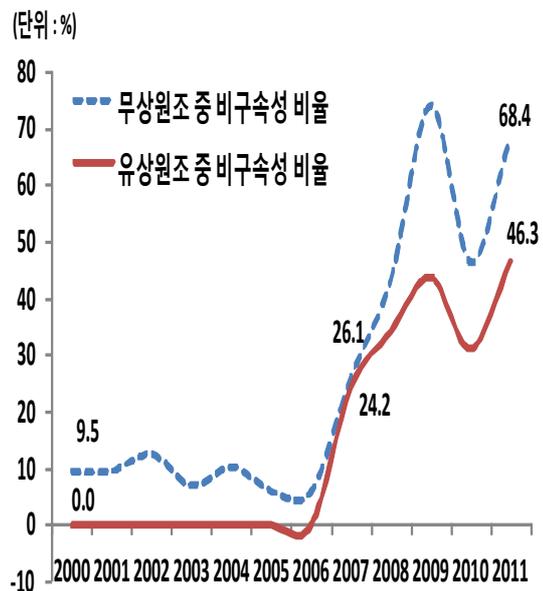
- DAC 회원국 비교 : 2011년 DAC 회원국들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3.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51.1%에 불과
 - DAC 24개국 평균 비율 : 평균 비율은 83.5%이며, 평균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51.1%, 22위)을 비롯한 7개 국가
 - 1인당 GDP 유사국 : 그리스(47.8%), 포르투갈(12.0%)에 비해선 높지만, 스페인(93.0%)에 비해서는 40%p 가깝게 낮음
 - 한편, DAC 회원국들 중 무상원조 비율이 비교적 낮은 일본의 경우(24개국 가운데 21위)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로 추진해 2011년 94.3%로 12위를 기록 중
-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의 양자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크게 증가
 - 2000년 한국의 무상원조 가운데 비구속성 비율은 9.5%에 불과했지만, 2007년 26.1%로 3배 가까이 상승한 이후 2011년에는 68.4%에 달함
 - 유상원조는 2006년까지는 100.0% 전액 구속성 원조였으나, 2007년부터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면서 2011년에는 46.3%까지 증가

< 2011년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한국의 양자원조 간 비구속성 원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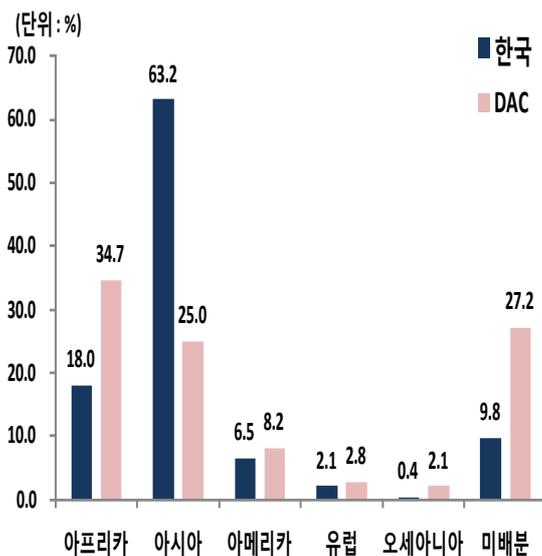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 (지역별·분야별) DAC 회원국에 비해 아시아 및 중·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많고, 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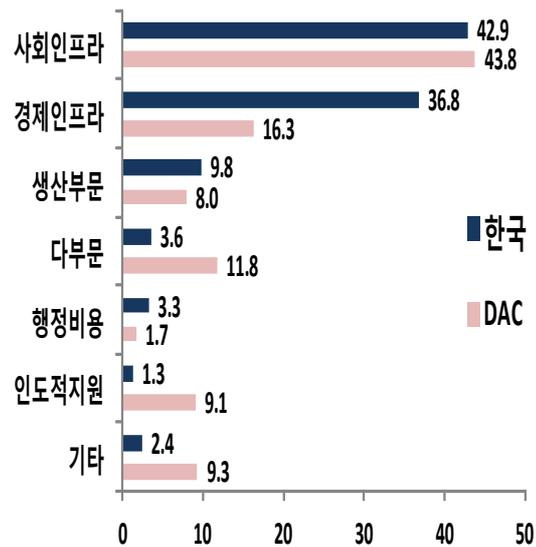
- 지역별 DAC 회원국 비교 :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반면, DAC 회원국은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심
 - 2011년 DAC 회원국들의 경우 아프리카(34.7%)와 아시아 일부 국가(25.0%)를 중심으로 최빈국⁴⁾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율(63.2%)이 가장 높음
 - 특히 2012년 기준 한국의 대개도국 수출 중 아시아 개도국의 비중이 66.3%⁵⁾에 달해 한국의 ODA는 경제적으로 이해가 밀접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
- 분야별 DAC 회원국 비교 : 한국의 경제 인프라 사업 비중이 DAC 회원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음
 - 한국의 경제 인프라 사업 비중은 36.8%로 DAC 회원국 16.3%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DAC 회원국들은 상업적 연계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도적 지원과 기초생활부문 등에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한국 및 DAC 지역별 원조 비교 >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 미배분은 두 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여 특정국가 지원 실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임.

< 2011년 한국 및 DAC 분야별 원조 비교 >



자료 : OECD IDS Online DB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4) OECD는 소득그룹별로 최빈국(1인당 GNI 935달러 이하), 기타저소득국(1인당 GNI 1,0005 달러 이하), 하위 중소득국(1인당 GNI 1,006~3,975 달러), 상위 중소득국(1인당 GNI 3,976~12,275 달러)으로 구분함.
 5) 2012년 한국의 對 개도국 수출액은 3,000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아시아권 개도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제외)의 수출액은 2,000억 달러에 달함.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한국의 ODA 수준은 OECD-DAC 가입 4년차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나, 경제규모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

- 첫째, 전체 공여 수준은 DAC 회원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DAC 가입 4년 차 실적 기준으로는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
- 둘째, DAC 회원국들의 무상원조 평균 비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DAC 가입 초중반 무상원조 상황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 셋째, DAC 회원국에 비해 구속성 원조(tied aid) 비율은 높지만, 2007년부터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음
- 넷째, DAC 회원국에 비해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아시아에 대한 지원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다섯째, DAC 회원국에 비해 경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인도적 지원과 기초생활부문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임

○ (시사점) 한국의 ODA는 OECD-DAC 가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와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미흡 사항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의 모범적·통합적 ODA 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ODA 통합 추진체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

- 정부의 2015년 목표치(현행 ODA/GNI 0.12%→ 0.25%)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준(2011년 DAC 평균 0.13%)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키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 특히 ODA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당위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홍보 확대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한편, ODA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기구 설립이나, 기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이 필요
 - 특히 국제사회⁶⁾를 비롯해 ODA Watch⁷⁾ 등 민간기구는 한국의 ODA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편, 원조통합 방식 도입, 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의 추진체제 사례연구 등으로 총괄·정책·수립·집행의 단일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해방이후 한국 전쟁 등의 위기 속에서도 국제원조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의 무상원조 비중은 58.1%로 DAC 회원국의 평균 비율(88.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상원조 비율 확대 노력이 시급함

셋째, 수원국과의 동반성장과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속성 원조가 지속될 경우 수원국의 빈곤퇴치보다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국익 도모를 위해 구속성 ODA 사업이 일정부분 추진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OECD-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결과 보고서. 2013. 1. 30.

7) ODA Watch, OWL's View 69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7대 개선 과제』. 2012. 9. 1.

넷째, ODA를 통한 한국의 외교 역량 확대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OECD-DAC 동료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아시아 지역, 특히 지역 내에서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
- 이에 한국은 최빈국이 집중(49개국 중 33개국)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여 빈곤 퇴치 및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빛을 진 국가들에 대해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 당시 UN 참전국으로 참여한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의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 개발에 관한 경험을 비롯해 전반적인 OA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이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제발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체제 구축이 필요
- 한편 베트남에 대해서도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원조 확대가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yhlee@hri.co.kr, 02-2072-6222)

[참고자료] 한국의 ODA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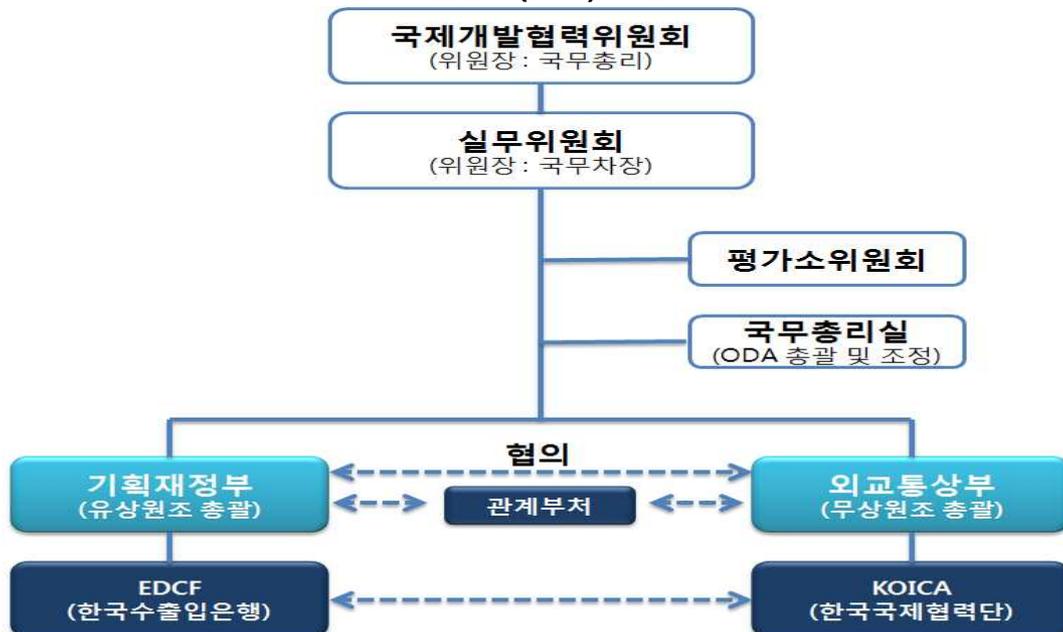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괄 하에 주관,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

- 총괄 및 조정 : 2010년 신설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ODA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리실이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 중
-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관련 다자원조를,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및 UN 관련 다자원조를 주관 중
- 시행기관 :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유상원조를, KOICA는 무상원조를 실시중이며, 개별부처 및 지자체도 ODA 사업에 독자적으로 참여 중
 - 한국수출입은행(EDCF) : 기획재정부 산하 유상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 중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외교통상부 산하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젝트 및 해외긴급구호 사업 등을 진행

○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ODA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양분되어 실시되고 있음

- ODA Watch 등 민간기구 등은 한국의 ODA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편, 원조통합 방식 도입,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



자료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2013년 ODA 정책 설명회 자료집』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1.8	2.8	3.7	1.2	2.8	0.1	1.6	1.1	2.5	-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4	-0.3	0.3	-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1	3.8	-
중국	9.3	7.8	8.1	7.6	7.4	7.9	7.6	7.7	7.5	7.8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25일	10월 3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51	2.55	0.04%p
	엔/달러	77.66	79.37	85.86	97.39	98.51	1.12¥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797	1.3723	-0.007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570	15,546	-24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088	14,328	24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0	2.82	0.02%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61.8	1,060.7	-1.1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34.4	2,030.1	-4.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25일	10월 3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7.71	96.31	-1.40\$
	Dubai	104.89	92.89	107.99	104.47	106.50	2.03\$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2.56	277.86	-4.7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137	294	431	298	322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6	2.2	1.4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